

尹 도어스테핑 중단... “불미사태 재발방지 없이 재개 없다”

MBC기자-참모진 설전 논란
도어스테핑 출입구 가벽 설치
與 “사과 없는 MBC가 초래한 것”
野 “불편한 질문 거부, 닫힌 불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시대를 열며 국민과의 소통으로 시작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21일부로 중단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11월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직후 MBC 출입기와 대통령실 비서관 간 설전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당시 MBC의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기자가 후속 질문을 이어

가자 대통령실 비서관이 질문 태도를 지적하고 끼어들면서 설전이 벌어졌었다.

또, 전날(20일)에는 윤 대통령과 기자들이 도어스테핑을 하는 1층 출입구에 나무합판으로 만든 가벽이 설치되면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취지와 의미에 대한 의구심이 자아났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등 내부 정례 회의를 제외하

면 외부 일정이 없지만, 평소와 달리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공장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에 의지가 강했다”며 “그렇게 6개월 동안 언론인과 누구도 해 본 적 없는 도어스테핑 제도를 만들어왔다. 도어스테핑을 정착시키고 전통으로 만들려는 것은 스스로 질문을 받고 견제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고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과 나은 소통을 위해 오늘 도어스테핑 중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에 여야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도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도어스테핑의 잠정 중단을 알렸다”며 “그 중심에 MBC가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서도 “MBC는 공영방송이다. 그러나 MBC는 지금까지 일련

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르고, 언론도 분명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상식을 부디 명심해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대인가”라며 “재발 방지 방안을 운운하는 것은 기자들이 대통령의 말씀에 따져 묻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참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라며 “열린 소통을 하겠다”며 불편한 질문도 참아넘기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경호·보안상의 이유라고 밝히며 가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핑계로 들린다”며 “MBC 기자와의 설전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野3당 국정조사 압박에 국민의힘 ‘버티기’

與 “경찰 수사 미진하면 국정조사”
조사 거부 이유로 ‘정쟁 되기 때문’

국민의힘이 10·29 참사 국정조사에 “지금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에서 국정조사 압박에 나서자 버티기로 맞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제출을 원내교섭단체(국민의힘,

민주당)에 요청한 데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정조사 추진’ 방침으로 화답했다. 같은 날 야 3당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야 3당 주도로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거부한 이유로 ‘정쟁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10·29 참사 희생자가 민법에서 밝힌 가해자·대상 주체로 분류하기 힘든 상황도 국정조사 거부 이유로 꼽았다. 이 때문에 법적 책임을 따지는 절차 이후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참사 관련 조사대상 기관으로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경찰특별 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

울 용산구 등을 지정했다.

조사 범위는 ▲정부·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 소방, 행정, 보건 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 회피 의혹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으로 정한 바 있다.

국정조사 기간은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안이 통과되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이다. 해당 기간에 기관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위는 민주당(9인), 국민의힘(7인), 비교섭단체(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 등 모두 18인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이상호 민주당 의원으로 내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참여하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 3당 주도로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데 대해 “(야 3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중간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대로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며 참사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정조사 합의에 응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당정,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나선다

관련 건강보험 제도도 보완

국민의힘과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 및 요양병원 선도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관련 건강보험 제도 역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당이 내년도 예산에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설치,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 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관련 예산 345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후속 조치다.

당 정책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민건강지킴이 따뜻한 동행 중증·희귀질

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단체 대표로 승일 희망재단 공동대표인 합합듀오 지누선 멤버션(로션김)도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증·희귀 질환 관련 국가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유전적 희귀 질환으로 고생하는 국민과 관련한 약자 동행 예산 토의를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당과 정부, 민간단체가 모인 간담회 결과 ▲희귀질환 치료 및 요양병원 선도시범사업 실시 ▲희귀질환 관련 건강보험 제도 보완 등이 결정됐다.

특히 승일희망재단이 건립 중인 중증·희귀 질환 환자 요양병원에 정부 재정 지원 방침도 정해졌다. 요양병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당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 건립 후 운영비 지원 등은 복지부·기재부 등에서 검토해달라고 당이 요청했다.

/최영훈 기자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 처리 속도

시가로 삼성전자 보유분 평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의 정기 국회 처리를 노린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금액이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가 제때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 금액을 평가할 때 현행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다.

삼성생명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980년 주당 1072원으로 매입한 ‘취득원가’로 평가받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매각해야 한다. 총자산(약 310조원)의 3%인 약 9조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시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율 가치는 약 30조원이 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